

“내년 농어촌특별세 폐지 시 농어촌 지원 7.6조원 증발”

민주 윤준병 의원 “1994년 도입 이후 2차례 연장 농어촌특별세 목적 고려 영구세 전환방안 검토”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체결 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농어촌특별세가 내년 6월 일몰될 예정이다. 만약 폐지될 경우 약 7.6조원이 증발되면서 농특회계는 물론 농업농촌직접지원기금과 균특회계·축산발전기금에도 큰 타격이 생겨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영농인력 육성 등의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타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을 지원하고 있어 농업 분야 전반에 걸친 사업 촉소가 불가피한 전망이다.

특히, 농어촌특별세는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가 한시제에서 영구세로 전환된 것과 달리, 10년씩 2차례에 걸쳐 연장될 뿐 한시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한시제인 농어촌특별세를 영구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음·고창)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7조6,199억원으로 올해(6조9,880억원)보다 6,319억원이 증가했고, 15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절반에 달하는 4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만약 내년에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될 경우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 증발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농어촌특별세가 주요재원인 농

물기함이 다가오자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방법을 택했다.

반면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는 교육세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1990년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제에서 영구세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농어촌특별세 역시 농어업 발전과 소멸 위기에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해 단순 연장이 아닌 영구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규모는 7.6조원에 달하는데, 만약 현행대로 내년 6월 말 폐지되면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 그대로 증발하는 것은 물론 농어업 예산 축소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목적세인 교육세는 한시제에서 영구세로 전환된 바 있는 만큼 이미 10년씩 두 차례에 걸친 연장을 또 다시 답습하기 보다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영구세 전환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특별세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조세감면 세액·개별 소비세액·종합부동산세액·레이세액 등 다양한 세원의 부가세로 과세하고 있다.

정수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세입으로 전액 증당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음=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정확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 절반, 소아청소년과 의사 없다”

진형석 도의원, “필수의료인력 확보 위해 보건 의료 정책 강화”

도내 전체 응급의료기관 20곳 중 10곳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근무하고 있고 김제 등 6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교육위원회)은 11일, 전북도의회 제40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전북도가 보건 의료 정책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형석 의원은 “최근 수도권 마저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소아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소아 의료 인력 부족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올해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 졌다’고 말했다.



2021년 38.2%, 2023년 25%까지 급감한 상황으로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한 전국 수련 병원 68곳 중 무려 55곳은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형석 의원은 “도내 역시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서 전북대 병원만 4명 모집에 단 한 명 지원하고 원광대병원과 예수병원은 전공의를 모집하지 못했다”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25년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정원대비 약 5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도내 20개 응급의료기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절반인 10개 기관

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있고, 김제,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소아청소년과의사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응급의료의 핵심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인데, 6개 지역의 경우 소아응급환자를 태우고 전주 등 도시권으로 이동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공모사업을 발표했다. 과거 사례처럼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우려가 크다”며 “전북도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형석 의원은 “도내 의료자원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요하기 보다는 분배와 균형을 통해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자립복지재단 폐쇄 후 9년 여전히 법인 청산절차 중”

이병철 도의원, “자립복지재단 부지 내 추진 중인 장애인 복지시설 설립 난항... 긴밀 협조체계 구축”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11일 제40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립허가 취소 이후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인 청산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자립복지재단 청산문제를 현재 부지 내 추진 중인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리더야 할 재단의 청산절차가 늦어지며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도교육청의 장애인 직업전문특성화학교 설립과 관련해 부지 양여 방식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이 발생했고, 청산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로 인해 부지 양여 과정에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산 지연의 주원인은 전주 시에서 재단에 부과한 지방세 1억4천 만원이었기 때문에 전북도, 도교육청, 전주시 간 협조체계만 이루어졌다면 몇 년을 해결하지 못하고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 판단해 각 기관 간 적극적인 조율을 요청했다.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폭행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던 상황 속에서 도내 자립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시설과 보호조업장 내 원생들에 대한 성폭행이 수년간 지속된 사실이 밝혀지며 2015년 재단이 운영해 온 시설들에 대한 폐쇄조치와 함께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내려졌고, 2018년 3월부터 청산절차가 돌입했다.

이후 자립복지재단이 있던 부지의 경우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한 장소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종합타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전북도교육청의 장애인직업전문 특성화학교 설립 등이 계획되며 현재 건립을 위한 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재단 내 부지에 건립 예정인 시설들의 경우 사업 시행 주체들이 달라 기관 간 협조나 의견조율 등이 매끄럽지 못한 실정이고, 관련 시설들의 사업추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정

리되어야 할 재단의 청산절차가 늦어지며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도교육청의 장애인 직업전문특성화학교 설립과 관련해 부지 양여 방식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이 발생했고, 청산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로 인해 부지 양여 과정에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산 지연의 주원인은 전주 시에서 재단에 부과한 지방세 1억4천 만원이었기 때문에 전북도, 도교육청, 전주시 간 협조체계만 이루어졌다면 몇 년을 해결하지 못하고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 판단해 각 기관 간 적극적인 조율을 요청했다.

그 결과 도교육청이 2023년 본예산에 학교부지 매입비용을 편성하면 전북도가 전주시에 체납된 세금을 갚은 후 6월까지 청산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도교육청은 기관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본예산은 물론이고 5월 추경에도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청산절차가 또 다시 지연되며, 도내 장애인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재단의 기본재산에서 청산인의 월급이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이병철 위원장은 “청산절차를 비롯한 자립복지재단 부지에 대한 계획이 늦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도내 장애인과 가족이라는 것을 전북도와 전주시, 전북교육청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하며, 자립복지재단 부지가 전북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송영자 익산시의원
교권 회복 챌린지 참여

익산시의회 송영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0일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최근 잇따른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교권 실태 확인과 회복을 위한 필요성을 알리고 교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해 국민의힘 전남 청소년 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으며, 송영자 의원은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으로부터 챌린지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송 의원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 침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서고, 교육이 바로 서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어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며 “교사가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속히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자 의원은 다음 챌린지 도전자로 경주시의회 정원기 의원, 국민의힘 익산시(을) 당협위원장 임석삼 의원, 익산시(을) 당협 여성부장 김유빈을 지명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www.wku.ac.kr

원대한 꿈의 세계

WONDERLAND WKU

원광대학교

202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나/다군)

2024. 01. 03(수) ~ 01. 06(토)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